

자치와 난민

– 일제시기 만주기행문을 통해 본 재만조선인 농민 –

윤영실*

1. 들어가며: 재만조선인 농민, 물음으로서의 타자의 얼굴
2. 재만조선인과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전제들
3. 재만조선인의 자치지향과 좌절
 - 1) 재만조선인의 '자치 사회'와 '무국민의 과공(誇矜)': 이돈화의 만주 기행을 중심으로
 - 2) 국가들 사이에서 재만조선인 자치의 협상, 분열, 좌절
4. 재만조선인과 '난민'의 표상: 1930년대 초중반 만주 기행문들을 중심으로
5. 결론을 대신해서

1. 들어가며: 재만조선인 농민, 물음으로서의 타자의 얼굴

한 사람이 구술하는 삶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자. 구술은 2003년 4월 28일 길림성 왕청현 하동촌 집단이민 부락터에서 진행된 것으로, 다른 600여 편의 구술 기록과 함께 『중국조선족 사료전집: 역사편 이주사 11』에 실려 있다. 구술 기록 앞에 짤막하게 소개된 구술자의 신원은 다음과 같다.

최학현(崔學鉉), 남, 1923년 쏘련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출생하였다. 부모님 고향은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이다. 그는 1927년에 흑룡강성 류하현에 갔다가 연변으로 왔다.¹⁾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간강사.

1) 김춘선, 2011 『중국조선족 사료전집: 역사편 이주사 11』,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531-537면(이하 최학현의 구술 인용은 모두 같은 글에서 인용하며, 따로 면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구술은 먼저 아주 1세대인 최학현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짤막하게 간략화하여 둔다. 그는 조선이 일본에 식민화된 후, “여기서는 못살겠다!”라는 생각에 고향을 떠났다. 1914년에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건너간 그가 중국으로 재이주한 것은 1927년이었다. 그 사이 공산화된 소련에서, 조선 출신 여성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 최학현이 5살 되던 해였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 흑룡강성에서 ‘개척’하고 살다가, 벌리라는 곳을 거쳐, 길림성 하동촌 집단부락에 정착했다. 아주 2세대인 최학현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도 이곳이다.

최학현 일가의 아주 경험은 만주사변 이전 조선을 떠난 농업 이주자들이²⁾ 공유하는 일반적 회로를 따른다.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일본 제국 통치 아래에서 ‘못살겠’기에 조선을 떠났던 이들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소련이나 중국 영토에서 쉽게 정착의 기반을 잡지 못한 채 전전하다가, 1930년대 중후반 제국 일본의 대륙 팽창과 재만조선인 집단부락 정책을 계기로 일본 제국의 통치 안에 귀속되었다. 이 회귀의 구조, 즉 일본 제국의 ‘밖’을 향해 떠났다가 그 ‘안’으로 회귀했던 재만 조선인들의 삶의 경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이 물음은,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일련의 해석 논쟁이 보여주듯,³⁾ 재만조선인 농민들을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를 둘러싼 식민지기 조선 문학이나, 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날 한국 문학 연구의 쟁점과도 직결되어 있다. 식민지기 ‘만주서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탈민족주의적 해석들은 기존의 소박한 친일/반일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식민지 조선인이나 재만조선인들의 만주 서사에 투영된 유사제국주의를 신랄하게 폭로했다.⁴⁾ 그러나 절박한 생존의 경계 위에 서있던

2) 오늘날 중국 동북3성에 분포한 중국 조선족의 현재적 정체성과 일제시기 ‘만주’ 및 ‘재만 조선인’이라는 용어 사이에는 매울 수 없는 균열과 간극이 있다. 그 불연속성을 감안하면서, 이 글에서는 일제시기의 역사를 다룰 때에 한해 만주 및 재만조선인이라는 용어를 별 다른 표기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3) 「농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해석 논쟁에 대해서는 하재연, 2008 「‘신체제’ 성립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한국현대문학연구』 25, 283-310면 참조.

4) 김철, 2002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상허학보』 9, 123-159면;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한국근대문학연구』 4, 92-119면; 정종현, 2005 「근대 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만주국’ 전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28, 229-259면.

재만조선인들의 삶을 ‘제국의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전일화된 민족주의적 해석 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후 만주서사에 대한 해석은 탈식민주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피식민자의 제국의식에 나타나는 ‘균열’이나 양가성을⁵⁾ 좀 더 섬세하게 읽어내려는 노력들로 이어져왔다. 한편 흔히 민족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저항’과 ‘협력’ 구도 역시 민족주의적 관점을 자체적으로 극복해가는 중이다. 작가적 윤리의 근소한 차이들을 분별하면서 비민족주의적 저항에 주목하거나, 재만조선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그것이다.⁶⁾

그런데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한국 문학 연구에서 식민지기 만주 관련 문학은, 대일 협력 문제를 사유하는 창이자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리를 재는 작가들의 ‘시험성적표’로 간주된다.⁷⁾ 왜 식민지 조선인의 대일 ‘협력’을 사유하는 데 만주가 거듭 호출되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만주가 반도에 비해 제국 통치의 외부에서 내부로, ‘저항’에서 ‘협력’으로서의 전환이 좀 더 선명하게 가시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탈민족주의 연구들이 거듭 강조하듯, 만주는 조선인이 일본 제국의 피식민자이자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식민자로서의 이중성을 지닌 공간으로, 피식민 ‘민족’과 ‘제국’의 공모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설명에 따르면, 제국 일본의 지원금을 받아 집단부락에 정착하고, ‘자위대’를 구성하여 ‘비적’(항일연군)과 맞섰던 재만조선인 농민은, 제국의 ‘협력자’임에 분명해 보인다. 물론 두 가지 설명은 ‘협력’을 다른 방식으로 자리매김한

5) 서은주, 2010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현경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31-263면.

6) 한수영, 2006 「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의 문제」 『친일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이선미, 2005 「만주 체험과 만주 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 15; 송명희, 2010 「암흑기 재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3, 113-145면; 김재용, 2011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 12, 7-26면; 한홍화, 2012 「작가의 공간의식과 만주의 의미: 이태준의 「농군」과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 등 참조.

7) 서경석, 2004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345면.

다. 첫 번째 설명에서 ‘협력’은 도덕적 변절이나 사상적 전향의 결과로 이해되며,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선이나 진리로 가정된 ‘저항’의 부정적 대립항이다. 반면, 탈민족주의에 입각한 후자의 설명에서 ‘협력’은 식민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근원적 상동성에 따른 결과이며, 피식민자의 ‘제국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좌일 뿐이다. 그에 따르면, 재만조선인 농민들은 일본 제국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개척’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식했던, ‘제국의 농군(農軍)’이 될 것이다. 재만조선인 농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집단부락에 수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⁸⁾ 그러나 제국의 강제성만을 강조하는 범박한 논의는 피식민 민족을 순결한 희생자로 표상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탈민족주의적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 대략의 추세를 보면, 한 쪽이 저항과 협력 구도에 고착되어 지식인-작가들의 소극적 저항을 구제하는 데 분주하고, 다른 쪽이 오로지 식민지의 저항적, 희생자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깨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하위주체인 재만조선인 농민들은 ‘민족의 죄인’, 혹은 ‘민족이라는 죄인’으로 거듭 낙인찍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남한의 한국문학 연구자들)가 역사 속의 타자(식민지기 재만조선인 농민)이자 현실의 타자(오늘날의 중국 조선족)인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들을 민족의 수난자나 배신자, 혹은 제국의 협력자라는 표상 안에 가두면서, 우리는 하위주체를 침묵시킬 뿐 아니라 심문하는, 또 하나의 지식-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근대 문학 연구라는 지식장에서, 이런 물음은 좀처럼 질문되지 않는다. 제도적 학문과 문학적 ‘표상’ 연구라는 이중의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늘 현실에 대해 말하면서도, 현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안온한 학

8) 홍종필, 1999 「일제의 재만조선인 통제를 위한 철령 안전농촌에 대하여」『명지사론』 9, 62-108면; 김주용, 2006 「만주 지역 한인 ‘안전농촌’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38, 108-134면; 유필규, 2008 「1930년대 연변지역 한인 ‘집단부락’의 설치와 통제적 생활상」『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331-374면. 역사학계의 재만조선인 집단부락이나 안전농촌 연구들은 대개 집단부락의 강제성과 통제성을 자명한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친일’에 대한 논의들은 ‘강제’나 ‘통제’ 역시 좀 더 섬세하게 규정되고 규명되어야 할 착종된 언어임을 보여주었다.

문장 안에서 문학 텍스트 속에 재현된 재만조선인 농민을 다룰 때, 우리는 그들을 역사성이나 신체성이 탈각된 채 어떤 문학적 해석에도 열려있는 투명한 기표로 환원하곤 한다. ‘얼굴’이 삭제된 채 집단적 표상으로 환원된 타자를 심문하면서, 연구자 스스로가 쉽게 ‘윤리적’ 자리를 점유할 때, 정작 소멸되는 것은 문학의 윤리다.⁹⁾ 그러므로 문학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은 어떤 불쾌감이나 불안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가령 ‘그들’이, 시공간적 거리를 넘어, 문학적 재현이라는 장막을 찢고, 피와 살을 가진, 말하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대면하고 있다는 가정 말이다. 그런데 내가 최학현 할아버지가 구술하는 삶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불완전하게나마 복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타자와의 대면(對面)이다.

최학현. 그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에서 출생했지만, 5살 무렵인 1927년 법적으로 중화민국 영토였던 만주로 재이주했다. 그의 부친은 1930년대 중후반 일본의 조선인 집단부락 정책에 따라, 만주국 치하의 길림성 하동촌에 정착했고, 그 역시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1944년 ‘일본군’에 징병된 그는 (출생국인) 소련과의 전쟁에 파견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일본이 폐망하자 ‘일본인’ 부대장은 해방된 ‘너희 나라’로 가라며 ‘조선인’ 병사들을 방출했다.¹⁰⁾ 그러나 그가 돌아간 곳은 물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선이 아니라, 집과 가족이 있는 길림이었다. 일본 군대에서 혹독한 구타와 체벌을 경험했고, 소련군과 국민당군의 ‘난시(난리)’를 겪었던 그는, 팔로군과 만나 변화한다. “군중들과 같이 오락도 하고 군중들을 사랑하”는 팔로군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는 군대”라는 믿음에, 신혼의 부인마저 버려두고 팔로군에 지원한 것이다. 팔로군에서 보낸 짧은 기간은 그의 구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자, 그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곧 ‘조선인’이라는 이

9) 주디스 버틀러(양효실 옮김), 2008 『불확실한 삶』, 경성대출판부, 85면 참조.

10) 일본 패전 후 최학현이 만주의 일본 군대에서 방출된 것은 오히려 ‘행운’이었다. 일본군에 잔류해 있던 조선인들은 소련군에 억류되고, 심지어 일본군 포로의 일부로서 시베리아, 몽골 등으로 끌려가 수년간의 강제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련에 끌려간 한인 수는 대략 2,421명, 강제노역 중 사망자는 71명으로 추산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 2007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김효순, 2009 『나는 인민군, 일본군, 국군이었다』, 서해문집 등 참조.

유로 차출되어, ‘북조선’ 인민군에 배치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다. 북한 인민군을 따라 아버지의 고향 근처인 부산까지 내려간 그는 퇴각 중에 심한 부상을 입고 우여곡절 끝에 길림으로 후송되었다. 오랜 치료 끝에 자식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할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부상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았다.¹¹⁾

최학현이라는 타인의 삶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학 연구 일반을 추상적인 것으로 기각하고, 실제의 삶을 통해서만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문학이나 문학 연구가, 타자를 재현하거나 재현된 타자를 해석하는 행위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 줄곧 말해왔던 바를 상기하고 싶다. 그에 따르면, 타자는 더 이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대상, 진리의 자리를 점한 우리가 심문하고 판결해야 할 역사라는 법정의 피고, 손쉽게 분석, 해석, 평가할 수 있는 박제화된 문학적 소재가 아닐 것이다. 타자로서의 그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균열시키고, 우리의 윤리적 확신을 동요시키며, 투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상들을 다시 불가해한 깊이를 지닌 세계의 혼돈 속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구체적 타자와 대면하여 무력해지는 순간, 그리하여 새삼 세계에 대한 물음이 촉발되고 새로운 말을 찾아 나서는 순간, 길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여행, 이런 것이야말로 문학과 문학 연구 고유의 영역이 아니던가. 이런 맥락에서 최학현이라는 구체적 타자의 삶은, 문학이 어떤 자명한 이념적 잣대에 따라 재현하고 설명하고 판결해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한국 문학(연구)의 전제들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물음이다.

11) 최학현의 구술에서 전쟁 이후의 생애는 부록처럼 짧게 처리된다. 그의 삶의 기억은 일본군-팔로군-인민군으로서 경험했던 전쟁의 강렬한 체험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 “내 다른 력사는 없소. 그저 군대를 갔다 온 력사가 중요하지”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50년이나 지속된 삶에, 왜 다른 이야기가 없겠는가. ‘그의 력사’(his-story)에서 삭제된 다른 이야기들 중 일부는, 구술 중간에 추임새처럼 끼어드는 부인의 목소리로 증언된다. 가령, 정신병을 앓던 오랜 세월, 옷을 벗은 채 정처 없이 해매 다니던 (때로는 옛 사랑의 여인인 박순옥을 찾아서!) 그의 이야기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고생’했던 부인의 증언 속에서 단편적으로 재현된다. ‘그녀의 이야기(her-story)’는 분명, 최학현의 ‘역사’가 미처 담아낼 수 없는, 세계의 또 다른 단면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가지 않은 길’로 남겨둘 수밖에 없겠다.

2. 재만조선인과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전제들

우선, ‘재만조선인’을 조선 ‘민족’의 연장으로 전제하고, 재만조선인이나 식민지 조선인에 의해 생산된 ‘만주 문학’을 ‘한국 문학’의 일부로 영토화하는 방식. 재만조선인을 한국 민족주의 논쟁의 주요한 소재로 거듭 소환할 때, 우리는 재만조선인=식민지 조선 민족=한(韓)민족=남한의 국민이라는 무차별적 동일화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최학현의 삶은 이러한 동일시의 연쇄가 결코 자연적이지도, 자명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대한 분량의 『중국조선족 사료전집』이 보여주듯, 재만조선인은 식민지 조선 민족이나 한민족으로 단순히 등치될 수 없는, 이주민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서사, 역사를 구성해 왔다.¹²⁾ 나아가 재만조선인/중국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자 소수민족이며 남한의 ‘재중 동포’로서, 우리와 동일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현실의 타자이기도 하다.¹³⁾ 이 엄존하는 타자성의 망각은, ‘민족’의 획일화된 정체성을 비판해온 한국 문학 연구의 흐름이, 역설적으로 ‘민족’이라는 기표에 결부되었던 다양한 역

12) 중국 조선족이 구성한 자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선족 사료전집: 이주사』는 앞의 10권을 전근대 시기 조선에서 간도(혹은 만주, 혹은 동북3성)로 건너간 이들의 ‘도강’과 ‘월경’의 기록들에 할애한다. 그렇기에 일제시기 자유이민이나 정책이민으로 중국에 건너온 이들의 구술을 모아놓은 전집 11권은 그토록 장구한 이주의 역사에서 단지 마지막 한 단락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13) 재만조선인에서 남한 국민까지 이어지는 무차별적 동일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재만조선인의 상당수, 특히 재만조선인 농민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중국에 남았다. 이는 일본에 ‘협력’했던 집단부락 농민들을 중국에 대한 식민자로 환원하는 논법이 논리적으로 단순할 뿐 아니라, 중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윤리적으로 부당한 공격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재만조선인의 귀환 여부는 대단히 모호한 범주인 대일 ‘협력’ 자체가 아니라, 그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달랐고, 그 이상으로 국공 양당의 배타적/우호적 한인 (및 소수민족) 정책과 토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오늘날 남한에 거주하는 약 80만 명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출입국 및 귀화 정책, 노동 조건상의 차별, 일부 대중의 조선족에 대한 배타적 혐오가 보여주듯, 중국 조선족은 이미 남한의 ‘국민’이나 ‘민족’ 범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면한 현실에서 한국 국민주의나 민족주의의 억압받는 타자인 그들이, 한국 문학 연구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거듭 소환되는 것은 기묘한 전도가 아닐 수 없다.

사적 경험과 복수적 주체성, 이질적 의미망들을, 오로지 비판을 위해 재구성된 단일한 정체성과 자명한 소여, 민족 표상들의 상동성으로 환원해버리는 경향을 예시한다. 그러나 최학현의 삶은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¹⁴⁾ 그중에서도 농민이라는 하위계층의 특이성, 나아가 그들의 삶의 조건이 시기별로 급변하는 양상을 통해서만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위주체의 삶의 구체성을 보아야 한다는 요구는, 대표/재현하는 행위들의 한계를 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하위주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토록 복잡한 정체성의 변동을 겪어야 했던 그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폭력일지도 모른다. 소련인/일본인(조선인), 중국인/일본인(조선인), 만주국인/일본인(조선인), 중국인(조선인)이었고, 소련과 중국과 한국의 공산 정권 수립기 극심한 좌우 대립을 관통했던 그의 삶은, 여러 국면에서 ‘너는 누구인가’를 신문하는 권력과 마주쳤을 것이다. 신문하는 권력의 폭력은 중국 조선족 아주 1, 2세대들의 구술에서 온갖 이름의 ‘난시(난리)’들로 기억된다. 일본군 토벌대의 난시, 토비 난시, 공비 난시, 국민당 난시, 소련군 난시, 그리고 일본에 ‘협력’한 전력이 있는 이들은 문화대혁명도 하나의 때늦은 난시로 겪어야 했다. 각각의 난시에서 너는 누구인가를 신문하는 권력은, 신문받는 자의 대답과 무관하게, 너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권리이기도 했다.¹⁵⁾ 최학현의 구술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14) 만주를 국가들의 ‘경계’ 지대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설정은 꾸준히 이어져왔고, 국가나 국민들 ‘사이’에 놓인 재만조선인의 디아스포라(이산) 경험에 주목했던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분석의 각론까지 이런 문제의식을 밀고나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일종의 ‘잠재적(the virtual)’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산 경험을 언어로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일본 제국 신민, 중화민국 국민, 식민지 조선 민족이라는 현실적(the actual) 범주들의 견인력에 쉽게 이끌려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다음 연구들의 문제의식, 요컨대 ‘변경’으로서의 만주와 재만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내재적 관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조금 더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는 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한수영, 2003『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의 문제』『상하학보』11; 한석정 외, 2008『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임성모 외, 2010『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재용 외, 2014『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소명출판 등 참조.

15) 신문(訊問)의 폭력적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는 도미야마 이치로(심정명 옮김),

점, 그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그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삶의 구체성은,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상징적 주체화를 거치며 상실되었다고 가정되는, ‘주체 없는 주체’의 알 수 없는 깊이¹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특정한 ‘국민’이나 ‘민족’으로 분절함으로써 그의 삶에 온갖 곡절들을 야기했던, 지배 권력의 폭력적인 예속화 과정, 그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표면 자체에 새겨져 있다.

그 구체성이란 가령 이런 것이다. 러시아와 소련, 일본 제국과 만주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북한과 남한. 이 상이한 국가 권력들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에게 특정 국적을 부과하거나 박탈했다. 그렇게 부과/박탈된 소속/자격이야말로, 그의 생사의 기로, 그가 누릴 수 있거나 없는 권리들, 그의 이주와 정착의 흐름을 결정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을 표시하는 국적과는 별개로, ‘조선인’이라는 ‘민족’ 규정은 언제나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그의 운명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일본 제국 안의 괴식민 ‘민족’, 소련이나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서의 ‘조선인’(혹은 ‘고려인’)이라는 규정은, 그가 완전한 ‘국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불순한 혼적이자 불길한 낙인이었다. 예컨대, 소련에서 중국으로의 재이주는 사회주의 혁명 초기의 우호적인 소수민족 정책이 스탈린 집권 이후 억압적으로 변질된 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가 겪은 온갖 난사는, 조선인의 외국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제국의 국적법이, 그를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체가 의심스러운, 적국(일본)의 일원으로 뚫어두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그가 한때 만주국의 2등 국민이라는 하위의식에 빠져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주의 ‘조선인’들이 일본 패전 때까지 만주국 국적을 얻지 못했으며,¹⁷⁾ 실제 상 권리들은 더더욱 2등 국민의 지위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은 여러 실증 연구들이 밝혀왔던 바다. 그가 ‘만주국군’이 아니라 일본군(관동군)에 징병된 것도, 원하던 팔로군(중국 공산군)에 들어갔지만 조선인민군에 차출된 것도, 다름 아닌

2015 『유착의 사상』, 글항아리 참조.

16) 김철, 2016 「저항과 절망 없는 주체를 향하여」 『말과 활』 10.

17) 재만조선인의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관동군(재만조선인을 만주국민으로 편입 시킬 것을 주장)과 조선총독부(재만조선인을 만주국 인민이자 일본제국 신민으로 규정)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최학현이 자의로 선택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던 국적과¹⁸⁾ 민족 규정이야말로, 그의 삶의 곡절(曲折)들을 야기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둘째, 최학현의 이야기는 한국 문학 연구가 흔히 분석의 층위로 삼아왔던 이념, 의식, 관념, 도덕 같은 것들이, 하위주체의 삶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시야만을 제공함을 상기시킨다. 민족·주의, 제국·의식, 제국과 식민지의 ‘공모’나 ‘동지적 관계’, 혹은 개인적, 의지적, 도덕적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는 한에서의 ‘저항’과 ‘협력’ 같은 어휘들. 또한 ‘국민’은 물론이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념’,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나 ‘귀속 감정’, ‘상상’과 ‘표상’의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사태의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협소한 시야로 인해 사태를 왜곡해서 보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족’은 주관적 상상이기 이전에, 근대 제국주의와 국민국가의 지식-권력에 의해 정의, 분류, 위계화되고, 국가의 인구센서스를 통해 등록되고 관리되며, 권리들의 차등적 분배의 기준으로 작동했던, 담론적 구성물이다. 역사상의 많은 경우 ‘민족’은 차별이 가해지는 분할선이자 차별에 저항하는 전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계급이나 젠더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층위에서, 사회적 적대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자연적, 문화적 주체로서의 ‘민족’이 있다/없다가 문제라기보다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역사적 예속화/주체화의 양상들이야말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재만조선인을 일컫는 ‘민족’이라는 이름과 식민지 조선 ‘민족’, 한(韓)‘민족’이나 남한의 ‘민족’이 서로에게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동 속에서 다양한 예속화/주체화 양상과 결부되었음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18) 만주국 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했던 것에 비해, 최학현의 구술은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아, 만주국 시기 그의 정확한 국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주 시기(1904년 민적법 시행 이전에 조선을 떠난 경우 일본 국적에 기록되지 않으나, 최학현의 아버지는 조선의 민적에 등록된 이후 조선을 떠났기에 일본 국적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최학현의 출생지(이주지에서 출생한 이주 2세대는 일본 국적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소련으로부터의 재이주(소련에서 만주국으로 재이주한 경우 무국적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일본군에 징병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최학현이 처음에는 무국적 상태였다가, 하동촌 집단부락에 입주하면서 일본 국적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의 경험은 제국과 식민지라는 이항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들과 민족들의 중층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재만조선인이 겪었던 온갖 난리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애도되지 못했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겪은 폭력은 온갖 방향에서 왔지만, 그중 어떤 것은 제국/식민지의 이항대립적 인식틀 안에서 보이지/말해지지 못했다. 예컨대, 항일 민족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전제하면, 끝까지 항일 무장투쟁을 고수했던 공산당의 역사적 경험이 특권화 된다. 이런 담론에서 보이지/말해지지 못하는 것은, 공비 난시, 즉 공산당의 항일 투쟁 자체가 재만조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무장한 정의’로 작동했던 역사적 국면들이다. 만주에서 공산당의 항일 투쟁은 오늘날 쉽게 민족주의와 등치되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전일적 지도 아래에서, 그것은 때로 조선 민족주의(조선인의 독자적 국민국가 수립 지향)와 극명하게 배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으로 분류되었던 이들의 생존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도 있었다.²⁰⁾

그렇다고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쪽이 재만조선인의 고통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재만조선인을 일본에 대한 피식민자요, 중국에 대한 식민자라는 양가적 지위로 분석하는 탈민족주의 관점은, 제국/식민지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기보다 반복하고 강화한다. 그것은 이분법적 질문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 논리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대답의 최대치로서 양가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19) 이는 또한 ‘민족’과 ‘민족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족’은 근대 제국주의와 국민국가의 지식-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부과된 탐론적 구성물이자, 민족적 차별/저항의 전선으로 작동했던 역사적 형성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다층적이며 가변적인 주체화의 양상들에 붙은 이름이다. 민족주의는 특정한 민족이 단일한 국민-국가를 수립하거나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이다. 민족주의는 특정한 ‘민족’ 의식에 의해 규정되지만, 모든 ‘민족’ 의식이 반드시 민족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 비대칭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주민족들이다.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기획으로 수렴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들은, 오늘날 혼란스럽게 착종된 민족, 국민, 네이션, 내셔널리즘 비판을 재사유하는 시금석이 된다.

20) 4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특히 1930년대 초중반은 이념들의 상호경쟁이 격화되면서 재만조선인들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던 시대였다. 김기립은 일본의 제국주의, 소련의 사회주의, 중국의 국민주의를 재만조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3개의 무장한 정의’라고 표현한다.

어떤가 하면, 이것인가 저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강박이야 말로, 재만조선인을 일괄하여 피식민자=식민자로 낙인찍는 대답을 결정짓는다. 더욱이 양가성의 역설적 의미를 충분히 천착하기 보다는, 피식민자인 줄 알았던 그들이 사실 식민자였다는 식의 가치 뒤집기에 머물면서, 사태에 대한 이해는 단순화된다. 재만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식민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재만조선인이 중국 군벌, 중화민국 관현, 국민당 군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있던 공비에게 겪었던 온갖 폭력은 보이지/말해지지 않게 된다. 반면, 중국은 (조선인을 그 일부로 포함한) 일본 제국과의 이항대립적 관계에서 피식민자로 자리 매김되기에, 중국 내부의 억압기제로 작동했던 국민주의(동화에 대한 압력)나 한족 내셔널리즘의 소수민족 박해는 말해질 수 없다. 이러한 완강한 해석틀이 재만조선인의 수난에 대한 당대의 증언들과 상충될 때, 폐기되는 것은 종종 ‘해석’이 아니라 ‘사실(史實)’이다. 재만조선인의 수난(고통)에 대한 증언들은, 그들을 순결한 피식민 민족으로 표상하기 위한 과장으로 쉽게 치부되곤 한다.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의 경험은 국가들 ‘사이’에 놓여 있던 그들의 고유한 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억압과 식민지 민족주의라는 이항관계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이 겪었던 폭력은 복수의 국가들(일본, 중국, 소련)로부터 왔으며, 역사적 부침 속에서 면면히 이어진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는 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 국가 안팎에서의 ‘자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만주사변을 전후한 재만조선인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민족주의적 저항으로부터 제국에 대한 협력으로 이행한 것도, 식민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상동성에 따른 필연적 귀결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를 대신해 나는 국가들 사이에서 재만조선인들의 ‘자치’ 지향(국가 바깥에서의 자치), 자치 공간의 소멸과 ‘난민’화 과정, ‘안전’을 매개로 한 재만조선인의 일본 제국 ‘통치’로의 편입이라는 설명을 시도 할 것이다.

3. 재만조선인의 자치 지향과 좌절

1) 재만조선인의 ‘자치 사회’와 ‘무국민의 과공(誇矜)’: 이돈화의 만주 기행을 중심으로

이 글을 시작하며 던진 물음은 이런 것이었다. 일본 제국 통치역의 ‘밖’을 향해 떠났다가 그 ‘안’으로 회귀했던 재만조선인들의 삶의 경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물음은 사건적 질문으로 되물어질 수 있다. 그때,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만주국 치하에서 일제가 조직한 집단부락에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제국의 척식기구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위대’를 구성하여 비적(항일공비)에 맞서기도 했던 농민들. 나는 우리가 사용해왔던 어휘들(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개념과 인식), 즉 피식민 민족의 협력과 저항이나 제국의식 같은 어휘들이,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초중반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이 썼던 일련의 만주 기행문들을 다시 읽음으로써, 그들이 보았고, 말(기록)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들리지 않는 재만조선인의 어떤 형상을 복원해볼 것이다. 그것은 어떤 본질론적, 원초론적 의미에서의 민족적 주체로도, 어떤 실질적 의미에서의 제국적 주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난민’의 형상이다.

이돈화가 1925년에 썼던 기행문은,²¹⁾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이 된다. 그는 1925년 5월 20일, 신의주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서간도의 흥경(興京)으로 향했다. “흥경 동포의 부름을 받아”(105면) 강연을 하러 가는 길에, 그 일대 조선인 사정도 시찰할 목적이었다. 흥경까지 가는 길은 지난했다. 신의주에서 탄 아침 기차는 밤 10시에 무순에 도착했고, 무순에서 흥경까지는 중국인 마차로 꼬박 4일이 걸렸다. 이돈화가 ‘마차 노동’이라 부를 만큼 험한 길이었다. 흥경은 안봉선(安奉선)과 장봉선(長奉선) 같은 지선에서도 백 리 이상 떨어진 교통의 외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흥경은 “일본인

21) 이돈화, 1925.7 「남만주행: 1신」『개벽』 61: 1925.8 「남만주행: 2신」『개벽』 62(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표기한다).

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요, “조선인의 이주가 많이 있어”(113면)온 곳이기도 했다. 특히 3.1운동 이후 흥경은 “만주에 있는 배일조선인의 소굴이라고 여러 번 문제”가²²⁾ 되었으며, 이곳을 근거지로 삼은 ‘5천 명의 독립단’이 “장차.. 조선 안으로 침입할 계획”이라는²³⁾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만큼 일본군의 토벌도 끊이지 않고,²⁴⁾ 마적도 들끓었지만,²⁵⁾ 조선인의 조직화 또한 활발했다. 한때 이곳을 관할했던 통의부는 독립군 5개 중대와 유격대 3대 소대의 병력,²⁶⁾ 재무부, 군무부, 학무부, 교통국, 군무국, 검무국, 통신국을 둔 중앙조직과 지방통관(統管)까지²⁷⁾ 갖추고 있었다. “주민 보호”와 “독립사상전”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세금”도 “수납”하는²⁸⁾ 엄연한 자치체였던 것이다. 주민은 대개 가난한 농민이었지만, 자체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열심이어서,²⁹⁾ 1925년 무렵 흥경에만 12개의 조선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돈화가 찾아간 1925년에도, 흥경 일대에는 통의부의 후신인 정의부가 존재했다. 이돈화의 전언에 따르면, 8부 체제의 중앙부서와 100호, 1000호 단위로 촘촘히 짜인 지방조직을 갖춘 정의부에는, 조선인 4만여 호가 소속되어 있었다.³⁰⁾ 암록강을 넘자마자 “여기가 외국”(105면)이라고 실감했던 이돈화가, 만주 깊숙한 곳 흥경에서 오히려 “새 조선을 발견”(111면)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삼원포 근방에 본거지를 둔 ‘남만주 자치본부’를 “사회라고 별명을 지어”(91면)³¹⁾ 부른다. 그에 따르면, ‘남만주 자치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3.1운동 이후 토

22) 「영사관 순사 피살」『동아일보』, 1921. 10. 29.

23) 「오천 명의 독립단」『동아일보』, 1922. 10. 17.

24) 「간도에 일병파견설」『동아일보』, 1923. 2. 7.

25) 「마적이 동포를 총살」『동아일보』, 1923. 4. 19.

26) 「현재 병력 왕성」『동아일보』, 1924. 1. 26.

27) 「통의부 내막」『동아일보』, 1923. 12. 25.

28) 「통의부의 세력 왕성」『동아일보』, 1923. 12. 6.

29) 예컨대, 광명학교는 흥경 왕청문 일대 1500호 가량이 매호 연 2원씩 부담하여 세운 것으로, 남녀 학생 200여 명을 가르쳤다(「흥경에 광동학교 재류동포의 열성」『동아일보』, 1924. 1. 15.).

30) 후대의 역사 연구에서는 정의부에 소속된 조선인이 1만 7천 호, 8만 7천 명 정도라고 보기도 한다. 유병호, 1992 「1920년 중기 남만주에서의 ‘자치’와 ‘공화정체’: 정의부와 참의부의 항일근거지를 중심으로」『역사비평』 19, 254면.

벌대, 협잡꾼, 도박꾼, 아편장사 등이 뒤섞여 만주로 흘러들고, ‘동족상쟁’이 일어나 선량한 농민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주민은 “자치적 사회”를 짓고, “사회는 주민의 향상 발전에 힘”써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91면)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은 ‘자치적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100호마다 백가장(百家長)을 뽑고, 백가장들이 모여 1000호의 대표인 통관(統管)을 뽑아 지방 ‘자치’를 행한다. 이와 별도로 위원 선거구를 두어 1구 1위원을 무기명투표로 뽑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³²⁾ 요컨대, 하의상달의 민주 공화정 제도다.

그렇다면 ‘사회’가 주민들을 위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돈화는 생계부의 활동만 자세히 언급하는데, 그 기본은 주민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나라 정전법에 기초한 공농제는 10호가 함께 지은 공전(公田)의 곡식을 ‘사회’가 관리하여 농민을 위한 공공급용으로 활용한다. 또 호계제(戶鷄制)는 가구 당 닭 한 마리씩을 추렴한 돈으로 중국인 토지를 구입하여 조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군사부, 재무부, 학무부, 외무부 등이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내실은 생계부(生計部) 활동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상해의 임시 ‘정부(government)’가 잠재적 국민으로서의 조선 민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활동에 주력했던 반면, 농촌 사회에 뿌리박은 통의부-정의부는,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 기구의 성격이 컸던 까닭이다.³³⁾ 또한 국가의 ‘통치(government)’가 아닌 ‘사회’의 ‘자치(autonomy)’인 한에서, 함께 삶(‘生’)을 도모(‘計’)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었던 까닭이다.

농촌 차치 공동체나 정전법 같은 고대적 이상이 근대의 민주공화적 가치와 교

31) 이돈화는 얼핏 정부조직과 비슷해 보이는 정의부 차치본부를 가리키기 위해, 왜, 어떤 의미로, ‘사회’라는 용어를 채택했던 것일까? 정부라는 용어가 중국 당국에 대해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상해 임시정부와도 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앙 ‘정부’와는 다른 충위에서 인민의 삶을 실질적인 공동체로 조직하는 ‘자치’의 단위로서 ‘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32) 채영국, 2000 『한민족의 만주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참조.

33) 김철성, 1997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전 중국 조선족의 민족차치운동」 『지역과 역사』 4, 266-287면. 재만조선인의 합법적 차치운동에 대한 역사적 일별로는 황민호, 2004 「일제 하 재만 한인사회와 합법적 차치운동의 전개」 『경기사학』 8 참조.

차함으로써, 취약한 자(the vulnerable)들의 연대, 자치, 상호부조의 공동체로서의 ‘사회’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상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는, 별도의 엄밀한 역사적 고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치의 실험이 만주라는 특이한 조건에서, 한시적이고 간헐적으로만 가능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당 정부, 일본 제국, 봉천 군벌, 공산당, 마적 세력이 복잡하게 길항하는 와중에, 국가의 통치역에 일종의 구멍들이 존재했던 상황이야말로, 국가 ‘바깥’에서의 자치라는 정치적 기회가 가능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제약과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자치는 “일종의 무국민” 상태를 ‘비애’의 원천이자 ‘과공’으로 받아들였던, 재만조선인들의 독특한 정치적 지향이었다. 한 기사는 그 정황을 이렇게 전한다.

(재만조선인은 일제 치하의-인용자) 현금의 조선에 적(籍)을 두기를 수치로 아는 동시에 중국에게 귀화하기는 더욱 수치로 알아 역사상에 일찍 전례를 보지 못한 일종의 무국민을 형성하였다. 억울한 일이 있으되 중국관헌에게 호소하기를 즐기지도 아니하고 일본영사관에는 더욱이 발걸음도 향하여 하지 아니하므로 전혀 아무 국가의 법률의 보호도 받지 아니하는 특종의 인민의 일단을 성(成)하였다. 그러므로 그네의 생명과 재산에는 일순의 보장도 없어 혹은 중병(中兵)에게 유린한 바 되고 혹은 일병(日兵)에게 유린한 바 되거나와 의연히 독립하여 어느 편으로도 부정한 의뢰를 하려 하지 아니한다. 이곳에 그들의 비애가 있고 동시에 그들의 과공이 있는 것이다.³⁴⁾

자치 노선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접점을 모색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현실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망국민의 이상주의적 설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조선인 이주민들과 일상으로서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요구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국가 바깥의 자치라는 이상주의가 현실 국가들(일본 혹은 중국)의 물리적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면, 지금-여기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주의는 결사(決死) 항전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았던 무장투쟁 노선과 같음을 빛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 국가들이 자치의 공간을 읊죄어 올수록, 자치

34) 「통화현사건 이백만 재외 동포의 처지」『동아일보』, 1924. 2. 12.

노선은 국가들과 타협하거나 죽음으로 대항하는 양극단의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었다.

2) 국가들 사이에서 재만조선인 자치의 협상, 분열, 좌절

이돈화가 남만주를 찾은 1920년대 중반, 가장 큰 압력은 중국 관헌(장쭤린의 봉천 군벌)으로부터 왔다. “조선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마적이 아니고 관군”(2신, 90면)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세평이었다. 일본군이나 마적에 대해서는 무장하여 싸워볼 수라도 있지만, 중국 관청에 대해서는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바깥의 자치라고는 해도, 재만조선인에게는 현실 국가인 중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역량도, 의사도 없었다. 애초에 국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한도 내의, 국가가 방임하는 만큼의 자치였던 셈이다.

중국의 재만조선인 정책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동북’지역의 정치 지형에 따라 급변했다. 1928년 이전까지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혼란은 재만조선인의 자치가 가능한 조건이자, 중국 관헌들의 탈법/합법적인 횡포가 자행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수리국을 신설하여 수도(수로)세를 물리거나, 조선 농민들이 수 만원을 들여 만든 수로를 정당한 보상 없이 강탈하는 일은 예사였다.³⁵⁾ 조선 사람의 토지 소유나 농사를 금지하는 법령을, (일본과의 마찰을 고려해) 표면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엄중히 시행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다.³⁶⁾ 호구 조사를 빙자하여 한 달에도 네다섯 번씩 돈을 걷어 가고, 돈을 내지 못할 경우 “함부로 구타”하는 일도 잦았다. 미쓰야 협정(1925) 이후에는, “지나가는 행인”까지 “(항일-인용자)독립군이라고 함부로” 불들어 가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중국 관헌의 몫이었다.³⁷⁾ 중국 보감대장 주기산이 돈을 빼앗으려다가 조선인 6명을 살해한 통화현 사건은, 조선인 사회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중국 관헌의 횡포를 당할 때마다, “실국(失國) 망명자인 동포들의 무처가소(無處可訴)라는 약점”이³⁸⁾ 새삼 상기되었다. 원래 “오족(吾族)의 영토”였고 “오족

35) 「홍경 수리국의 불공(不公)」『동아일보』, 1924. 2. 2.

36) 「표면으로는 부인 이면으로는 엄중 명령」『동아일보』, 1925. 9. 4.

37) 「서간도 이주동포의 최근 정황」『동아일보』, 1925. 1. 13.

의 손으로 개척”한 곳에서 “주인의 몸으로 객인(客人)의 학대를 감수”하는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별 다른 도리가 없었다. “중국 관헌의 박해가 더욱 심한” 남만주 일대에서는 1927년에 조선으로 되돌아간 농민이 “1개월 간 2천여 명”을³⁹⁾ 넘기도 했다. 조선에서 살 수 없어 떠나온 최하층민들이 다시 만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그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려 있었음을 뜻한다.

한편 1928년 장쭤린의 뒤를 이은 장쉐량이 항일, 반공, 친국민당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재만조선인에 대한 동화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자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특히 중국의 교육권 회수 정책에서 극대화되었다.⁴⁰⁾ 교육권 회수는 단순히 일개 관헌들의 횡포가 아닌, 중국의 주권 옹호와 국민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적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만조선인에게 그것은 강압적인 민족 동화 정책을 뜻했으며, 허용된 ‘자치’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반발했고, 다음에는 국민당 정부에 직접 줄을 대어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현실론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재만조선인이 “어떤 식민정책에 의함이 아니”요, “중국의 법권(法權)을 인(認)하는 평화스러운 교거민(僑居民)으로 자처하는 이상 중국의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⁴¹⁾ 논리였다. 국민당 정부는 “적화운동이나 **(일제-인용자)의 선구가 되지” 않는 한, “입적 조선인에 대하여는 평등의 국민적 대우를 약속”했다.⁴²⁾ 재만조선인 쪽에서도 중국 입적을 단행하여 “중국정부의 국민적 대우를 획득”하고, 중국인의 “강렬한 배외열”이 “약무력한 조선인”을⁴³⁾ 향하지 않도록 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당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동화’에 바탕을 둔 ‘국민적 평등’이었지만, 재만조선인으로서는 민족적 생존권과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국민적 평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⁴⁴⁾ 그러나 합법적 자치운동의 입지는 넓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단순

38) 「통화현 사건 이백만 재외동포의 처지」『동아일보』, 1924. 2. 12.

39) 「봉천 관헌의 박해로 이주 동포 속속 귀향」『동아일보』, 1927. 11. 17.

40) 「홍경 동포학교 12교 폐문」『동아일보』, 1927. 3. 2; 「재만조선인 학교 폐쇄, 철퇴 통달」『동아일보』, 1927. 11. 27.

41) 「재만동포교육문제」『동아일보』, 1929. 6. 12.

42) 「정치적 경제적 이익 옹호를 약속」『동아일보』, 1929. 8. 25.

43) 「다시 재만동포에 대하여」『동아일보』, 1929. 9. 19.

히 국민당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합법운동이라면 일반 민중에게 하등 이익이 없”으며, 좀 더 강력한 정치운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논제에서 빼”고⁴⁵⁾ 중국 국민화에 치중하자는 입장도 있었다.

재만조선인들의 자치운동은 만주에서 일본 제국 세력의 증대로 더욱 큰 난관에 봉착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건설한 철도는, 산간오지를 근거지 삼아왔던 조선인 자치체의 숨통을 점점 조여 왔다. 이돈화가 무순에서 마차로 4일 걸려 도착했던 흥경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무순과 봉천 양쪽에서 철도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했다.⁴⁶⁾ 1920년대 말에 이르면, 중국이 만철에 대항해 건설한 철도마저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을 위한 신속한 이동 수단이 되었다.⁴⁷⁾ 1931년 일본 세력권 안에 있던 만주 철도는 2,200km에 달했고,⁴⁸⁾ 만주사변 후 중국 철도 접수, 1935년 소련의 동청철도 인수로, 만주국 철도는 만철 본선과 지선, 국유선을 합해 9,000km 이상 뻗어 있었다.⁴⁹⁾ 만주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은 철도는 일본의 정치적 장악력으로 직결되었다. 일본 세력이 만주 전역에 속속 침투하면서, 자치 노선은 ‘항일’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되었다. 동아보민회, 양생계, 상조계 등 7개 단체가 “**(항일-인용자)운동 반대의 기치를 들고” 조직되었던 반면, 정의부 후신인 국민부는 바로 이 ‘친일’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⁵⁰⁾

44) 재만조선인의 중국 귀화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측의 통계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 1929년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귀화한 재만조선인은 12만 명 정도로, 전체의 1/10 수준이다. 楊昭全·李鐵環, 1992『東北地區朝鮮人革命鬭爭資料匯編』, 遼寧民族出版社, 94면(손춘일, 2001「만주사변전후 재만조선인문제」『정신문화연구』, 146면에서 재인용).

45) 「주요도시순회좌담: 간도편 4」『동아일보』, 1931. 1. 15.

46) 「무순 흥경 간의 경편부설 계획」『동아일보』, 1921. 11. 6; 「봉(천), 흥(경)간 철도 계획」『동아일보』, 1924. 1. 9.

47) 예컨대, 1929년에는 일본의 봉천, 무순 연합경관대가 정의부원들을 토벌하기 위해 중국 경영의 봉해선 열차로 해룡현 북산성자를 향하여 극비밀리에 출발했다는 기사가 전한다 (「연합경관대 오지로 또 출동」『동아일보』, 1929. 4. 5).

48) 이군호, 2004「일본의 중국 및 만주침략과 남만주철도」『평화연구』, 168면.

49) 1937『滿洲概觀』, 帝國在鄉軍人會本部, 63-64면에 의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50) 「국민부 완성의 제1보로 7개 단체 근멸 결의」『동아일보』, 1929. 8. 19.

한편, 국민당 정부와 연계된 재만조선인 자치 노선은 공산당의 타격 대상이기도 했다. 1차(1924.1~1927.7), 2차(1937.9~1945.8) 국공합작의 공백기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대립구도는 재만조선인의 좌우 대립 역시 극단화시켰다.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지도 아래 있던 공산세력은 ‘파괴공작’ 위주의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선의 자치주의자들 역시 “무력과 이론”으로 “청산”하고자⁵¹⁾ 했다. 1931년 「만주의 한국민족 문제에 관한 중공 만주성위의 결의안」은 만주사변 직전 중국공산당의 재만조선인에 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만주에 있는 한국 민족 가운데는 일부분 이른바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부〉, 〈신민부〉, 〈정의부〉 등을 조직하여 만주의 한국 민족의 또 하나의 통치자로 되었다. 그들은 임무금, 지방비, 잠시대부금 등 명의로 만주에 있는 한국 노고(勞苦) 노농(勞農)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한국 혁명대중 특히는 공산당에 대하여 직접 총살하고 암살하는 가장 잔혹한 백색 테러를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제국 주의, 중국 통치 계급과 결탁하여 전문적으로 혁명을 파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중략) 때문에 만주에 있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통치 계급의 충실향한 주구로 되었고 완전히 파쑈조직으로 되었으며 그들은 중한 노농 노고 대중의 적이다.⁵²⁾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 “완전한 민족자결”에 입각해 조선인들이 “독립 국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의 영도 아래 들어오지 않은 일체의 민족 자치 노선을 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메시지의 발신은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노선이 미묘하게 변화해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1차대전 이후인 1922년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까지 승인하는 ‘민족자결권=민족독립’을 주장(1922년의 중국공산당 제2차 국민대표대회 선언)했던 공산당은 공식적으로는 1937년까지 이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컨대 1934년 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 제14조는 “蒙古, 回, 藏, 苗, 藜, 고려인” 등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할 목적에서 각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51) 「燒原의 세로 대안에 접근하는 적색저기압과 동포의 안위」 『동아일보』, 1931. 1. 31.

52) 「만주의 한국민족 문제에 관한 중공 만주성위의 결의안」(1931년 5월 26일 성위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김우종 외 편, 2003 『동북지역 조선인 항일역사사료집 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365면.

스스로 독립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⁵³⁾ 공언했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반제투쟁이 시급한 “현시점에서의 선전구호는 민족자결이지 민족독립이 아니다”라며 ‘민족자결’의 의미를 ‘민족독립’(독립적 국민국가의 수립)이 아닌 ‘민족자치’(중국 국민국가 ‘안’의 민족자치)에 한정하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입장은 1937년 공산당이 내몽고의 독립승인 정책을 포기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즉 1920년대 후반에서 1937년까지, 중국공산당은 표면적으로 민족독립까지 포함한 민족자결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국민당, 반제 투쟁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서 소수민족의 정치적 이탈을 저어하거나 철저히 응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일제의 침략 통로였던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이 재만조선인을 향해 취했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반국민당, 반제를 최우선적 가치로 내건 공산당의 전일적 관점에서는 군벌이나 국민당 통치와 길항하던 조선인 자치의 의미는 물론이요, ‘항일’을 둘러싼 자치 노선 내부의 차이들도 지워진다. 오로지 항일/반일, 친국민당/친공산당 사이의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공산당 노선의 압박 속에서 재만조선인 사회 역시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치달아 갔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이념에 따른 내전 상태를, 재만조선인들은 일찌감치 겪어내야 했던 셈이다. 그 귀결은 재만조선인의 자치 공간, 이돈화가 증언했던 재만조선인 ‘사회’의 붕괴였다.

4. 재만조선인과 ‘난민’의 표상: 1930년대 초중반 만주 기행문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압박, 일본군의 토벌, 항일 공산 무장투쟁이라는 세 방면의 공격 앞에서 재만조선인은 점차 절박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적화나 친일 위협을 들어 재만조선인을 구축(驅逐)하고, 일본은 독립군이나 공비 소탕

53) 王柯(김정희 옮김), 2007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371-378면에서 재인용.

을 명분으로 그들을 토벌하고,⁵⁴⁾ 공산당은 맹렬한 항일 무장투쟁 노선에 따라 일체의 자치 노선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세계 적화의 “활화산을 폭발시키려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중국공산당), “대륙진출을 위한 만몽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국가적 통일을 위하여 분투”하는 중국의 3대 세력이 “만주를 중심으로 일대 旋渦(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처한 재만조선인은 “외로부터의 의혹과 학대,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상쟁”이라는 위험 속에서 점차 난민화되고 있었다.⁵⁵⁾

1930년 간도공산당 사건 취재차 만주에 갔던 시인 김기림은 재만조선인의 난민화를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한다.

우리들이 자리를 정한 이 지점은 바로 북위 42도 동경 1백29도 - 이곳을 정점으로 약 1천리를 반경으로 한, 북으로 입을 벌린 4분의 1 원주의 지대는, 실로 중화민국의 삼민주의적 국민 주체(國民主策)과 노서아의 인터내셔널리즘과 ××(일제-인용자)의 임페리얼리즘이 절충하는 삼각주다. 늘 다소의 혐악한 풍운이 베풍하는 이 분화구는 음산한 누(累)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략) 이 들에는 각각 3개의 무장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서로 자기야말로 정의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정의를 가장 유력하게 보증하기 위하여 그 정의를 견고한 철갑으로 무장하였다. 이 속에서 삼각형의 중심처럼 그 어느 정점에도 경도치 못하고, 서로 배치하고 반발하는 3개의 세력 사이를 교묘히 분치하여, 하등 생활의 안전보장도 없는 속을 오히려 그 생존을 보지(保持)하여 나가야 하는 종족의 거꾸러진 시체는, 연년히 오흐츠크로부터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과 서리 찬 대기를 녹이며 날카롭게 쏘는 봄볕에 두텁게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를 때면, 부스러진 얼음 조각 사이마다 이따금 이따금 떠내리지 않는 때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공(大空)을 쳐다보는 그들의 입은 마치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극동에 움직이는 심상치 않은 풍운을 머릿속에 그리며 극단으로 물맛이 없는 거리로 다시 내려왔다.⁵⁶⁾

간도공산당 사건은 1930년 5월 간도 용정 등지에서 공산 세력이 철도, 전선 등 일본 제국의 중요 시설을 파괴한 항일 무장투쟁 사건이다. ‘간도대사변 발발’

54) 「무장단 출현 무순서 긴장」 『동아일보』, 1931. 1. 2.

55) 「다시 재만동포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9. 9. 19.

56)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 6. 13-24(『중국조선족 사료전집: 언어문학편 3 산문』, 61면).

이라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김기림이 사건 취재를 위해 급파되었다. 여행 초반, 김기림은 기차 바깥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대륙 풍경에 자신도 점차 대담해짐을 느끼며, 저항의 공간으로서의 대륙을 상상한다. 드넓은 북만 천지는 제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외부’이며, 그렇기에 “이번 사변과 같은 큰일도 다반사”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변혁의 가능성. 조선인 최초의 순직 기자인 장덕준을⁵⁷⁾ 떠올릴 때, 김기림은 자신도 일제의 권력에 굽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용정에 도착한 그는 약간의 수련수련함을 제외하고는 권력의 지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실망한다. 중국 관헌은 위압적인 자세와 범더스러운 통치로 조선인의 순종과 헌납을 요구한다. “두터운 담장에 둘러싸이고 다량의 탄환을 보유한” 일본 총영사관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채 건재하다. 공산당의 ‘원대한 계획’에 타격을 입은 쪽은 오히려 조선인민회와 보통학교였다. 코뮤니스트에 따르면, “민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에서의 유력한 흡반”이며, 학교는 “생장하려는 어린 세너레이션에게서 발랄한 생명의 화염을 거세하는 아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만조선인은 “3개의 무장한 정의” 사이에 끼어 나날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중화민국의 주권 옹호(그리고 여기에 섞여든 한족 내셔널리즘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내부 식민지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리즘(정확히 말하면 소수 민족 ‘파벌주의’에 대한 탄압 명분으로 전락한 인터내셔널리즘), 일본 제국주의 대륙 팽창. 그 사이에서, 생활의 어떠한 “안전보장”도 없이 “생존을 보지하여 나가야 하는 종족의 거꾸러진 시체.” 김기림이 그들에게 읽어내는 것은 제국 국민이 되려는 욕망도, 공산주의의 혁명 이념도, 심지어 주권국가로 독립하려는 민족주의적 열망도 아니다. 허공을 향한 “그들의 입”은 “세계를 향하여” 다만, “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난민’의 형상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쓰인 한설야의 글에서 우리는 비슷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1933년 10월 24일 밤, 간도팔도구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급보를 받고, 역시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던 한설야가 취재를 위해 만주로

57) 10년 전(1920년) 일본군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혼춘의 조선 민간인을 학살했을 때, 그 사건을 취재하러 갔던 장덕준은 일본군에게 살해당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터였다.

향한다. 그런데 기행문은 팔도구 폭동에 대한 취재 내용이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김기림이 취재했던 간도공산당 사건인데, 당시 한설야는 우연찮게도 바로 간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사건 발생 후의 정황만을 전했던 김기림의 글에 더해, 사건 당시의 이야기가 뒤늦게 덧보태진다. 한설야는 공산당 폭동사건으로 어수선했던 용정 시내 분위기며, 폭동이 일어나던 날 밤 친구 P의 집에서 전깃불을 끈 채 숨어 있던 긴박한 상황을 짧게 스케치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폭동 다음날 바로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가을 다시 간도 추수폭동이 발생한 직후, 친구 P가 ‘초췌한 몰골’에 ‘중풍병자’처럼 손을 떨며 한설야를 찾아왔다. 추수폭동 때 그의 장인이 조선인민회 참의라는 이유로 “도끼날에 찔려 죽고”, 또 누구는 “머리 절반이 갈라져 죽”는 모습을 보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간도를 빠져 나온 것이다. 아버지와 딸, 장인과 사위의 구분 없이 “모두 죽이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서, P는 임신 중인 아내마저 버려두고 혼자 도망 나왔다고 고백한다.

한설야는 상황에 대한 논평을 자제한 채, ‘맹상군’ 같은 호인이던 P가 공포에 질려있는 정황만을 전달한다. 그러나 1933년, 또 한 번의 간도 무장투쟁을 취재하러 나서면서, 한설야는 왜 굳이 몇 년 전의 기억을 들춰내고 있는 것일까? P의 공포 속에서, 한설야의 침묵 속에서, 간도 공산당폭동에 대한 카프작가 한설야의 ‘비(非)동의’, 혹은 적어도 어떤 곤혹스러움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1930년대 초중반 극좌화된 항일 무장투쟁이 재만조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무장한 정의’가 된 것에 대한 착잡함에 다름 아닐 것이다. 기행문의 첫머리에서 한설야는,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흘러들었던 백만 조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저편 만주에는 백만의 백의인이 있다. 만일 영화를 구하고 명리를 탑하여 건너갔다면 백만이라는 수는 그다지 크게 우리의 머리를 찌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강을 넘기까지에는 실로 언어를 기(紀)한 비참이 있는 것이요, 고토(古土)를 쫓기어 남의 땅에 더부살이하는 그 처지에는 보다 쓰라린 대동적(大同的) 환란이 끊임 날이 없는 것이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보다 몇 갑절의 심통을 느끼고 보다 극심한 생활 - 아니 차라리 생존의 위협을 받는 터임에 그 백만은 이 땅 안 이천만보다 훨씬 크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일찍 인간폭포라는 출작을 쓴 일이 있거니와 생각이 이곳에 한번 부딪치는 때마다 여기에는 사회악 인간악의 분수령이 높게 날카롭게 솟아서 이편으로부터 저편으로 그 악에 밀리는 인간의 무리가 폭포와 같이 떨어져가는 것을 방불히 머리에 그리게 된다.

“비참”과 “환란”에 쫓기어 만주까지 흘러들었으나, 조선에서보다 “극심한 생활”과 “생존의 위협”에 고통 받는 재만조선인. 그들은 마치 온갖 “사회악, 인간악”에 떠밀려 분수령에 올랐다가 반대쪽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리는 “인간폭포”를 방불케 한다.⁵⁸⁾ 세계의 구조적 악에 의해 뿌리 뽑히고, 떠밀리고, 휩쓸려, 마침내 폭포처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자들. 그것은 바로 ‘난민’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김기립은 간도사건 취재를 마친 후, “극동에 움직이는 심상치 않은 풍운”이 재만조선인을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임을 예감한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의 발발로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폭력은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만주 곳곳에서 일상화되었다. 한편에서 일본군에 의한 중국 영토 정복과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조선인이 중국의 폐진병이나 폭도, 무장 공비의 보복 대상이 되었다. 1931년 9월 20일에서 1932년 1월 9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상황은 사망 943명, 행방불명 807명, 부상 362명, 납치 110명, 금품강탈 36건, 구타 13명, 강간 6명⁵⁹⁾ 등으로 추산되었다. 소식이 제대로 전해 지지 않은 산간오지의 피해는 더 커울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많은 재만조선인은 집과 땅을 버리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30년에 이미 공산당의 습격, 중국 경관의 무리한 조선인 검거, 일본 경관의 중국 출동 등 불안한 정세 속에서, 간도를 떠난 피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⁶⁰⁾ 만주사변 직후 각지에서 피난민이 급증하여, 조선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5천여 명에 달했다는 기사도 전한다.⁶¹⁾

58) 한설야, 「북국기행」『조선일보』 1933. 11. 26-12. 3. 7회 연재(『중국조선족 사료전집: 언어문화편 3』, 723-727면).

59) 최병도, 2004 「만주사변 발발 직후 재만조선인의 수난과 국내 민족주의 진영의 구호활동: 만주동포문제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8면.

60) 「간도 공기불안으로 피난민 속속 월경」『동아일보』, 1930. 10. 14.

61) 「불안한 만주에서 귀국 조선인 격증」『동아일보』, 1931. 10. 21.

이런 추세는 1930년대 중반 내내 이어져, 만주 벌판을 헤매는 피난민은 2만에서 3만 명을 헤아렸고,⁶²⁾ 조선으로 귀환한 자도 3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⁶³⁾ 일부는 소련 경대로 피난하여 생존을 도모하거나 항일 활동을 지속하기도 했다.⁶⁴⁾ 하지만 1934년 국경 수비 문제를 염려한 소련에서 조선인의 입국을 금지하고,⁶⁵⁾ 1937년에는 재소 조선인 18만 명을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⁶⁶⁾ 사태는 역전되었다. 이제 재소조선인의 궁핍상과 인권유린, 강제이주에 대한 소식은 오히려 만주국의⁶⁷⁾ 이념적, 정책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효과적 재료가 되었다.

재만조선인 피난민 문제는 1930년대 초중반 내내 조선사회의 큰 이슈였다. 각지에서 재만조선인 동포를 위한 성금과 구호물자가 조성되기도 했지만,⁶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각지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며 긴급구제에 나섰지만, 수용소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다.⁶⁹⁾ 만주 광야에 피난민이 2만을 상회하는데, 수용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가, 수용소 상황이 “현세 수라지옥”을 방불케 한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다.⁷⁰⁾ 그럼에도 일상이 전장이 된 상황 속에서 재만 조선인은 비교적 ‘치안’ 상태가 좋

62) 「간도사변 후의 피난민 간도만 만 칠천 명」『조선중앙일보』, 1934. 3. 8; 「사변 후 안주지 않은 조선농민 3만여」『동아일보』, 1934. 4. 20.

63) 「피난민 귀파시킨 후 본격적 이민계획」『조선중앙일보』, 1934. 1. 1.

64) 극동러시아 제주 조선인은 1932년 12만 4천명에서 1933년 가을 19만 4천 명으로 격증했다고 전한다(「극동 소련 영지내 이주 조선인 격증」『동아일보』, 1933. 12. 16).

65) 「조선인의 신입국 불허코 무단월경자 총살」『동아일보』, 1934. 3. 9.

66) 「재소 이십만 조선인 사막에 강제 이주」『동아일보』, 1937. 10. 9. 소련의 개혁, 개방 이후 공개된 사료들에 따르면,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재소조선인 수는 18만 명으로 추산된다(김 피오트르 게르노비치·방상현, 1993 『재소한인이민사: 스탈린의 강제이주』, 탐구당).

67) 「소련에 혹사된 비참한 조선인」『동아일보』, 1937. 10. 17.

68) 식민지 조선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던 재만조선인 난민 소식은 북미에까지 전달되었고, 미주 한인유학생 사이에서도 모금 운동이 일어났다(1931 Dec. “Koreans Suffer in Manchuria”, *Korean Student Bulletin No.4*).

69) 「불과 30여 간에 오백수십 명 수용」『조선일보』, 1931. 11. 11; 「3처에 2천여 명 1일 생활 비 6전 봉천기온 영하 20도 혹한」『조선일보』, 1932. 2. 25; 「완연한 생지옥상태 소아는 태반이 나병 합이빈 4개소 피난민수용소에 1천6백여 인 수용」『동아일보』, 1932. 3. 15.

70) 「전와(戰渦)의 만주 광야에 피난동포 2만여 명」『중앙일보』, 1933. 1. 4.

은 만철 연선의 수용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1925년 만주를 찾았던 이돈화는 “일본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일수록 “조선인의 이주가 많이” 이뤄졌다 고 증언했다. 그곳에서 ‘자치’와 ‘항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만주 의 조선인은 생존을 위해 일본의 세력권 안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일본 제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적 요인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줄 유일 한 현실적 세력이기도 했다. 바로 여기에 “재만조선인 문제”的 “딜레마”가 있었 다. 이 ‘딜레마’ 앞에서의 사상적 동요와 전향의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임원 근의 「만주국 기행-만주국과 조선인 장래」에서도 그런 고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봉천에 체류하는 짧은 동안에 이곳에 있는 몇 사람 공인(公人), 사인(私人) 을 만나 이로부터서의 재만조선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몇 마디 질문을 하여 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한결 같이 판에 박은 듯이 「부락생활」「집단생활」의 필요를 지적하였다. 제1로 만주에 있는 조선인에게는 급선무 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들 에게 대한 계몽운동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화급(火急)한 것은 당장 그들의 목에 찔리는 칼날과 가슴을 뚫고 나가는 총알을 막는 것이다. 늘 우리가 우리의 신경 이 마비될 만치 신문지상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바, 오지(奥地)에 거주하는 그들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수난상태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일본국의 토 벌대가 있고 경관대(警官隊)의 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적 철도 연선(沿線)과 근거리에 있는 이야기요, 위낙 교통 불편한 오지에서 이곳에 몇 사람 저곳에 몇 사람씩 점거(點居), 농경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인에게는 도저히 그다지 신속하게 구원의 손길이 뻗칠 가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뜻하지 못한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저들 정체 알 수 없는 중국인의 독수(毒手)에 희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부락생활」에 절대 필요가 있는 것이다.⁷¹⁾

사회주의자로서는 유일하게 신간회 비해소파이기도 했던 임원근이 봉천을 찾 은 것은 1932년 10월이었다. 만주사변 발발로부터 1년이 더 지났지만, 봉천에는 여전히 1만여 명의 조선인이 피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난민은 하루에 5전씩 지급되는 돈으로 좁쌀죽을 끓여 먹으며 ‘생활’이 아닌 ‘생존’만을 겨 우 유지하고 있었다. 경성에서 그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아니 믿고 싶지

71) 임원근, 「만주국과 조선인 장래, 만주국기행 2」『삼천리』 5-1, 1933. 1. 1, 55면.

않았다면 임원근은, 참상을 직접 목도한 후 동요한다. 재만조선인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계몽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화급(火急)한 것은 당장 그들의 목에 찔리는 칼날과 가슴을 뚫고 나가는 총알을 막는 것”이다. “일본군의 토벌대”와 “경관대의 보호”가 미치는 곳은 철도 부근뿐이요, 오지에 동떨어진 조선인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뻗칠 가망이 없”다. 다시 말해 일본 제국이 ‘보호’하는 것은 철도이지 조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정체 알 수 없는 중국인의 독수에 희생” 당하지 않기 위해 철도 부근의 ‘수용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리가 없는 자들, 그래서 수용소만이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장소인 자들. 임원근이 그들에게서 본 것은 ‘난민’의 형상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였다. 재만조선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부락생활, 집단생활의 필요를 지적”했다. 수백 호 이상이 결집해 부락생활을 하고, 무장을 통해 자위(自衛)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국의 실재가 확연한 이상”, 또한 만주국 통치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장래가 있는 이상”, 자위에 대한 요구는 만주국 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조선인에게 ‘항일’의 가능성 있는 한 일본이 조선인의 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 임원근이 이전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던 협화회에 주목하고, “협화정신”에 입각해 “재만조선인의 권리를 찾고 자유를 부르짖고 인간적 생활을 요구”(53면) 하는 데 새삼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런 정황 속에서였다.

5. 결론을 대신해서

한 연구는 조선 내 여론이 1930년대 초중반부터 재만조선인에 대한 “식민권력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고 밝힌다.⁷²⁾ 재만조선인 문제에 관한 한 이 시기에 대대적인 ‘전향’이 이루어진 셈이다. 나는 당대의 언론 보도

72) 김기훈,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1.

와 기행문들을 통해 재만조선인의 자치공간의 소멸과 난민화야말로 이러한 전향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계기였음을 그려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향이 단지 저항과 협력 사이의 도덕적 선택도, 식민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상동성에 따른 필연적 귀결도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역설에 맞닿아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국가 바깥에서 초법적 폭력에 노출된 난민이 ‘안전(security)’을 위해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를 욕망하게 되는 세계사의 역설적 구조. 피식민자가 완전한 난민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국의 지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된 ‘협력’의 메커니즘. 이 근원적인 역설들에 대한 성찰 없이는, ‘협력’에 대한 민족주의로부터의 비판도, 피식민자의 제국의식을 향한 탈민족주의로부터의 비판도 공허하다. 세계의 이 역설적 구조로부터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만조선인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에 저항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주장은 아니다. 재만조선인 농민들의 생애는 ‘협력’과 ‘저항’, 나아가 ‘권력’에 대한 우리의 관성적인 이해가 지난 한계를 드러낸다. 나의 제안은 우선 사회적 장(場)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개개인의 윤리에 대한 판단과 뒤섞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수준에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지배 하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놓인 저항과 협력이라는 도덕적 분할선이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적대의 대치선이다. 예컨대, 재만조선인 집단부락인 ‘안전농촌’은 국가 밖의 초법적 폭력에 노출되었던 재만조선인이 제국주의 국가(일제)의 법적 폭력 안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아이러니한 국면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안전농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단순히 제국 통치역의 안팎, 혹은 집단부락의 안팎이라는 물리적 공간이나 이념적 진영, 개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따라 저항과 협력을 구획하는 방식을 넘어, 지배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어디에서나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특정 국가의 통치역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지배와 저항의 사회구조적 수준과도, 민족주의 내지 항일을 지고한 가치로 전제함으로써 판별되는 도덕적 수준과도, 별개의 층위에 놓인다. 일제 말기의

‘전향’과 해방 후의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의 굴곡 안에서 개개인들의 윤리를 섬세하게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학 연구의 과제일 것이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어떤 이념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는 근원적 상대성 안에서, 자신이 믿었던 이념이 생을 배반하는 카오스적 순간에 직면하여,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차 우리를 구원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않는 신(이념)의 깊은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 태도와 행위를 준별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답해질 수 없는, 그러나 문학이 오랜 세월 답해오려 애썼던 이 물음이야말로, 오늘날 문학 연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윤리적 질문이 아닐까? 본고에서는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구는 별고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재만조선인 농민, 자치, 난민, 안전, 만주기행문

투고일(2017. 4. 25), 심사시작일(2017. 5. 4), 심사완료일(2017. 5. 26)

〈Abstract〉

Autonomy and Refugees

- Korean Chinese Farmers and Manchurian travelogues from
mid-1920s to early 1930s -

Youn, Young Shil *

This essay examines the Korean Chinese immigrants in Manchuria from the mid-1920s to the early 1930s, focusing on colonial Korean writers' Manchurian travelogues and the historical situations at that time. Starting with an oral history of Hak Hyeon Choi who had resided in a collective village of the Korean Chinese set up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I try to critically reexamine academic trend of Korean literary studies on the subaltern Koreans in Manchuria: indiscriminate identification of the Korean Chinese and the South Korean 'nation', idealistic approach to the 'nation,' and in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hinese' situations as an immigrant nation in-between states. As an alternative to both interpretive schemes about the Koreans in Manchur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sistance or pro-Japanese collaboration' and 'collusion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I demonstrate, first, their consistent orientation for autonomy either outside or inside a state, then, the frustration of the autonomist line and their becoming refugees, and, finally, their 'voluntary' reversion to the Japanese rule. Especially, this essay focuses on the concrete, historical situations of the subaltern Korean Chinese, who were violently suppressed by all of the three "armed justices": the assimilative pressu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e imperial Japan's expansion into Manchuria and the left-wing terrorism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This subaltern perspective leads us to an open question about the paradoxical structure of the modern world where the refugees exposed to extralegal violence are forced to 'voluntarily' aspire to the government of any state for their 'security.'

Key Words : Korean Chinese farmers in Manchuria, autonomy, refugees, security, Manchurian travelogue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